

작가 윤창광
"가는 날까지
원고 쓰겠습니다"
16·17면

현대불교

금주의 법구-법구경
한 그루의 나무를 자르지 말고
육망의 숲 전체를 베어내라.
그리고 영원한 자유를 찾아라.

1994년 10월 15일 창간

불기 2557년 단기 4346년(음력 7월 8일) · 주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제 953호 2013년 8월 14일 수요일

광복절 68주년... 일제 만행의 상흔 보듬는 한국불교

위안부
원폭2세

‘정당한 평가’ 노력 과제



나눔의 집의 '일본 위안부 역사관' 전시부스 모습(사진 왼쪽)과 합천 평화의 집이 8월 5일부터 6일까지 개최한 제2회 비핵평화대회(사진 오른쪽). 두 단체 모두 불교계 주도로 설립·운영하고 있는 곳이다. 일제 상흔이 빨리 치유되기 위해서는 사부대중과 시민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나눔의 집의 '일본 위안부 역사관' 전시부스 모습(사진 왼쪽)과 합천 평화의 집이 8월 5일부터 6일까지 개최한 제2회 비핵평화대회(사진 오른쪽). 두 단체 모두 불교계 주도로 설립·운영하고 있는 곳이다. 일제 상흔이 빨리 치유되기 위해서는 사부대중과 시민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올해로 한국이 일본의 제국주의에서 벗어난 지 68주년을 맞는다. 이미 반세기가 지났지만 일제의 상흔은 아직 아물지 않는 상처다. 대표적인 사례가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 희생된 종군 위안부 할머니들과 원폭 피해자 2, 3세대이다. 시대의 아픔이 돼 버린 이들을 보듬는 활동에 불교계가 적극 나서고 있다.

도 광주군 퇴촌면 소재 650여 평을 기증하면서 현재 위치에 자리 잡았다. 1998년에는 세계 최초의 성노예 테마 박물관인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이 건립됐으며, 2002년에는 올바른 역사와 여성인권 세우기를 위한 국제평화인권센터가 설립됐다.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에는 고통을 당한 피해자 할머니들의 생생한 육성증언과 고통스러운 기억을

니들은 최근 해외를 방문해 일본군의 만행을 알리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나눔의 집 안산권 소장은 "할머니들이 다 떠나시면 우리에게 무엇이 남을지 생각해야 한다"며 "주권을 빼앗긴 나라에서 나와 내 이웃이 당할 수도 있었던 '전쟁범죄'임을 인식해야 한다. 국민들은 자발적인 참여와 역사교육을 통해 올바른 역사

의 상흔이 1세대에 그치지 않았고 그들의 자녀에게 병마와 가난은 대물림 됐다. 이들 중 적지 않은 사람들이 다운증후군, 정신지체장애, 골다공증, 무혈성괴사증 등 정신·육체적 질환에 시달리고 있다. 그동안 많은 원폭피해자와 시민사회단체의 노력이 있었지만, 본격적인 관심을 받게 된 것은 불교계를 중심으로 2010년 3월 합천 평화의 집(원장 윤여준)이 설립되면서 부터다.

위안부 할머니위한 쉼터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등에 따르면 2013년 8월 현재 위안부 피해 생존자는 56명으로 2년 사이 14명이 더 줄었다.

불교계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해 21년 전인 1992년부터 노력해오고 있다. 대표적인 곳이 위안부 할머니들의 쉼터인 '나눔의 집(대표 월주)'이다. 경기도 광주 퇴촌에 있는 나눔의 집은 현재 강일출, 김근자, 김순옥, 박옥선, 배준희, 이옥선, 이용녀 등 7명의 할머니가 생활하고 있다.

1991년 7월 일본군 '위안부' 실상 첫 증언자인 김학순 할머니의 증언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국내 생존자들의 신고가 잇따랐다.

1991년 12월 불교인권위원회에서 '위안부' 피해 문제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고, 이후 시민들의 정성으로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던 할머니 7분을 찾았다.

그렇게 해서 나눔의 집은 1992년 10월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서 처음 개소식을 가졌지만, 재정 마련 부족으로 명문동과 해화동 등 전셋집을 옮겨 다녔다. 그러다 1995년 12월 불자 건축업자인 조영자 씨가 경기

광주 나눔의 집

- 불교계 중심으로 설립된
- 첫 위안부 할머니 쉼터
- 현재 7명 할머니 생활
- 연간 10000여 명 방문
- 21년간 인권 운동 펼쳐

희상하며 직접 그린 그림, 일제의 강제연행 입증자료 등 전시물이 6개의 주제로 나누어 전시되고 있다. 국제인권평화센터는 여성폭력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와 여성 인권운동을 하고 있다.

나눔의 집을 방문하는 사람은 연간 1만 여명에 달하며 봉사활동을 위해 찾는 사람도 400여 명이 된다. 이들의 방문은 할머니들에게는 따뜻한 위로가 되고, 일본의 역사왜곡을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다.

나눔의 집 할머니의 평균연령은 88세. 얼마 남지 않은 고령의 생존자임에도 불구하고 나눔의 집 할머니

합천 평화의 집

- 원폭 피해 2,3세 위한
- 한국 최초 지원 센터
- 불교 주도 2010년 창립
- 비핵화 운동 등 전개
- 전문 요양 시설 계획

관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 유일 원폭 2,3세 지원처

위안부 할머니들과 함께 최근 부각되고 있는 일제의 상흔은 '원폭 피해자 2,3세'들이다. 원폭 피해 자녀들 문제는 아직도 미해결된 과거사다.

1945년 8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폭이 투하됐을 당시 한국인 피해자는 7만여 명으로 생존자 2만 3000명은 한국으로, 2000명은 북한으로 돌아갔고 나머지는 일본에서 사망했거나 남겨졌다. 원폭피해자 1세대 상당수는 사망했고 2010년 현재 남은 이는 2600여 명이다. 피폭

불교계 구호단체 위드아시아(대표 지원)가 운영하는 합천 평화의 집은 △원폭2세 환우들의 건강과 복지 프로그램 운영 △가정방문 케어 및 생활지원 △환우 치료비 지원 및 지원 상담 등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비핵화 운동을 위한 '비핵평화 국제대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 올해에도 비핵평화 영화상영회, 평화한마당, 원폭특별법 제정을 위한 심포지엄, 68주기 한국인 원폭희생자 추모제 등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했다.

또한 합천 평화의 집은 2세 환우를 위한 전문요양병원 건립과 원폭 피해자를 위한 국회 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에 있다. 이미 경남도와 합천군의회는 이들을 위한 지원을 조례로 명문화하기도 했다.

이남재 합천 평화의 집 사무총장은 "원폭 피해 자녀들은 사회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빈약하다. 이들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돌볼 수 있는 시설이 절실하다"며 "불교계를 중심으로 노력하고 있는 사업인만큼 불자와 스님들의 관심을 바란다"고 밝혔다.

신종일·이어나 기자

종교인 과세, 2015년부터 본격 시행

'기재부' 세법개정안서 밝혀... 해묵은 논란 종식

이제는 스님을 비롯한 모든 종교인들이 2015년부터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많고 많았던 종교인 소득세 과세가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이하 기재부)는 8월 8일 발표한 2013년 세법개정안에서 소득세 세입기반 확대 차원에서 2015년 종교인 과세 추진 등을 골자로 소득세법 개정 작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재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최대 쟁점인 소득 분류 방법을 근로소득세가 아닌 '기타소득'으로 규정했다. 기타소득은 근로소득 이외에 강연료·인세·자문료·사례금 등 불규칙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붙는 세금이다.

기타소득의 80%를 필요 경비로 인정해 과세 대상에서 빼고 나머지 소득에 대해 22%(주민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 원천징수한다. 이렇게 되면 소득의 4.4%만 세금으로 내게 된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일부 환급도 받을 수 있다.

다만 종교인 납세부담협력 비용을 줄여주기 위해 종교인 소득 원천징수의무자인 사찰과 교회에 반기

납부특례를 부여해 1년에 2만만 세금을 내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종교단체에서 받는 소득 외에 근로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 등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 혜택을 준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종교인 소득세 과세는 오는 2015년 1월부터 시행된다.

1년 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시행되는 종교인 과세의 대상과 규모에

기타 소득 '사례금' 규정
1년 유예기간 두고 시행
조계종, 중앙종무기관부터
내년 근로소득세 납부 계획

대해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기재부는 유예기간동안 각 종교와의 협의를 거쳐 세부 시행령 제정한다는 1차적인 계획만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세부안을 마련하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종교 단체는 법률상 등록·신고 절차를 전혀 없이 정확한 공식 통계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기타

소득에 대한 세금 납부 역시 순전히 종교인 개개인의 몫으로 남아 있다. 현재 불교계는 종교인 소득세 과세가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사회 여론의 문제도 있지만 불교계 내부에서도 재정 투명화 등 긍정적 효과가 높다고 평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올해 초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종교인 과세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분위기를 이해하고 있다. 중앙종회, 교구본사 등과 협의 거쳐 종단적 입장을 내놓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2월 문용린 서울시 교육감 예방에서는 "무상급식을 위해서라면 종교인도 세금을 내야한다"는 입장을 내보이기도 했다.

종교인 과세 시행에 대해 조계종 기획실장 주경 스님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종교인에게 소득세를 부과하는 데 대해 종단은 거부감이 없다. 내년부터 중앙종무기관 교역직 스님들을 대상으로 근로소득세를 납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제는 과세 부문에 있어서 불교가 감할 것이 없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며 "투명하고 청렴한 사회를 위해 앞으로는 자발적이면서 앞서 가는 과세 정책이 불교계로부터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종일 기자

민추본-조불련 8.15 남북동시법회 연다

서울 봉은사, 평양 광범사서

한다. 민추본은 "지난 7월 25일 북측 조불련 측에 8.15남북불교도 동시법회와 남북불교교류 실무회담을 개최하자는 제안을 했다. 이에 조불련은 8월 2일 우리의 제안에 동의한다는 전문을 보내왔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민추본은 8월 18일과 19일 양일간 남북불교 교류 실무회담을 중국 심양에서 갖는다. 민추본은 "이번 '조국통일기원 8.15 남북불교도 동시법회'를 8월 15일 서울 봉은사와 평양 광범사에서 각각 동시 개최

한다.

민추본은 "지난 7월 25일 북측 조불련 측에 8.15남북불교도 동시법회와 남북불교교류 실무회담을 개최하자는 제안을 했다. 이에 조불련은 8월 2일 우리의 제안에 동의한다는 전문을 보내왔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민추본은 8월 18일과 19일 양일간 남북불교 교류 실무회담을 중국 심양에서 갖는다. 민추본은 "이번 '조국통일기원 8.15 남북불교도 동시법회'와 '남북불교교류 실무회담'은 남북 간의 긴장과 갈

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남북불교도들이 민족화해와 평화를 위해 마음을 모으고 실천행을 논의하는 장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위한 종교인 모임'은 8월 7일 프레스센터 19층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종교인모임은 인도주의의 구현차원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개성공단은 정상화 되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정혜숙 기자

953호 INDEX

시방세계
파리 7대학 한국방문현장



5
강의실종계
방한한 종사리 켄체 린포체

8
학술
방미 결정된
국보 반가사유상
중정제 100년, 논문 발표
근대문화유산연구소 발간



Since 1991 KASAN INSTITUTE OF BUDDHIST CULTURE 늘 푸른 컷진도량 가산불교문화연구원

“『가산불교대사람』 제14권을 출간하였습니다. 이 모든 功德을 伽山智冠大宗師 大覺靈前に 그리고 大衆에게 回向합니다.”



“항심(恒心)으로 고군분투하라! '항심'이 중생을 이익케 하는(饑念衆生) 원력(願力)과 함께할 때, 세간(世間)은 불멸(不滅)의 공덕을 얻는다”
하신 가산지관대종사님의 가르침에 따라 변함없이 정진하겠습니다. 가산지관대종사 열반후591일 가산불교문화연구원 연구원 모두 분향후 올림

서울시 창경궁로26길15(명륜4가206-6)
TEL 02)765-9602~3 FAX 765-5673